

안보 내세워 보수층 결집…민주당·사제단 동시 압박 ‘특검 피하기’

박대통령·정총리 사제단 발언 강경대응

민주 “시국 염중…특검 수용이 해결책”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25일 전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지난 22일 시국미사에서 나온 북한의 언행도 포격 관련 발언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표명, 과장이 확산할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연평도 포격 3주년을 언급하면서 “지금 북한은 연평도 포격 도발을 뉘우치기는커녕 이제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나라를 위해 짚음을 바치고 죽음으로 나라를 지킨 장병의 사기를 꺾고 그 희생을 헛되게 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국미사에서 박창신 원로신부가 “북방한계선(NLL)에서 한미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것은 장병과 북쪽에 살아가는 국민에게 큰 아픔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총리는 비판은 물론 수위가 높았다. 정총리는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박 신부의 발언에 대

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에 동조하는 행위”라며 “박 신부의 발언은 사제(司祭)이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을 망각한 언동으로 북한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과 정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각각 군통수권자와 행정부를 통괄하는 총리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를 지키는 일에 대한 강한 사명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민주당을 동시에 압박하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계속 시국미사를 하겠다고 밝힌 정의구현사제단의 향후 행보에 힘을 빼려는 것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 앙당이 주장해온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도입 등 정치적 현안을 잠재우려는 시도로 보는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과 총리의 이 같은 강경한 발언으로 ‘종북 논란’이 더욱 거세지면서 국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이미지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권 입장에서는 호재라는 시각도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시국미사 발언의 원인을 대통령의 태도에서 찾고 ‘종북 논란’에 대해서는 선긋기로 분명히 했다.

/박경기자jkpark@kwangju.co.kr

올 국민소득 2만4000달러 사상 최대 전망

분배 지표 뒷걸음…성장 과실 상위층만 누려

올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소득이 2만4000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환율 하락이 국민 소득 증가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환율 효과를 제외하고 나눠진 분배 지표를 고려하면 경제 성장의 과실은 상위층만 누리는 셈이다.

1인당 소득은 2007년 2만달러로 올라선 이후 사상상 7년째 제자리걸음이나 다름없다. 일본이 2만달러(1987년)에서 3만달러(1992년)로, 3만달러에서 4만달러(1995년)로 도약하는데 각각 불과 5년, 3년 걸린 것과 큰 차이가 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민총소득(GNI) 추계치를 인구로 나눈 1

인당 국민소득은 2만4044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나는 요인은 경제규모를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와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다.

GDP가 증가해 ‘파이’가 커지고, 환율이 지난해 1,102원에서 올해 1,095원으로 하락함에 따라 달러화로 환산한 GNI가 더 늘어난 결과다.

인구가 5022만명으로 지난해보다 0.43% 늘어나는 데 그친 것도 1인당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됐다. 이근태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난 데는 GDP 효과가 3.3%, 환율 효과가 2.9%”라며 환

율 효과가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어디까지나 평균 개념으로, 모든 국민이 동등한 소득 증가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소득분배 지표(5분위 배율)를 보면 올해 9월 말 현재 고소득층(5분위 계층)의 가처분소득이 저소득층(1분위 계층)의 5.05배로, 지난해의 4.98배보다 커졌다.

선진국에 견줘 뒤쳐지는 사회 투명성, 서비스 산업의 더딘 발전, 심각한 저출산·고령화가 1인당 소득 증가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합뉴스

을 효과가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어디까지나 평균 개념으로, 모든 국민이 동등한 소득 증가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소득분배 지표(5분위 배율)를 보면 올해 9월 말 현재 고소득층(5분위 계층)의 가처분소득이 저소득층(1분위 계층)의 5.05배로, 지난해의 4.98배보다 커졌다.

선진국에 견줘 뒤쳐지는 사회 투명성, 서비스 산업의 더딘 발전, 심각한 저출산·고령화가 1인당 소득 증가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합뉴스

을 효과가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어디까지나 평균 개념으로, 모든 국민이 동등한 소득 증가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소득분배 지표(5분위 배율)를 보면 올해 9월 말 현재 고소득층(5분위 계층)의 가처분소득이 저소득층(1분위 계층)의 5.05배로, 지난해의 4.98배보다 커졌다.

선진국에 견줘 뒤쳐지는 사회 투명성, 서비스 산업의 더딘 발전, 심각한 저출산·고령화가 1인당 소득 증가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합뉴스

을 효과가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어디까지나 평균 개념으로, 모든 국민이 동등한 소득 증가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소득분배 지표(5분위 배율)를 보면 올해 9월 말 현재 고소득층(5분위 계층)의 가처분소득이 저소득층(1분위 계층)의 5.05배로, 지난해의 4.98배보다 커졌다.

선진국에 견줘 뒤쳐지는 사회 투명성, 서비스 산업의 더딘 발전, 심각한 저출산·고령화가 1인당 소득 증가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합뉴스

을 효과가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어디까지나 평균 개념으로, 모든 국민이 동등한 소득 증가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소득분배 지표(5분위 배율)를 보면 올해 9월 말 현재 고소득층(5분위 계층)의 가처분소득이 저소득층(1분위 계층)의 5.05배로, 지난해의 4.98배보다 커졌다.

선진국에 견줘 뒤쳐지는 사회 투명성, 서비스 산업의 더딘 발전, 심각한 저출산·고령화가 1인당 소득 증가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합뉴스

을 효과가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어디까지나 평균 개념으로, 모든 국민이 동등한 소득 증가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소득분배 지표(5분위 배율)를 보면 올해 9월 말 현재 고소득층(5분위 계층)의 가처분소득이 저소득층(1분위 계층)의 5.05배로, 지난해의 4.98배보다 커졌다.

선진국에 견줘 뒤쳐지는 사회 투명성, 서비스 산업의 더딘 발전, 심각한 저출산·고령화가 1인당 소득 증가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합뉴스

을 효과가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어디까지나 평균 개념으로, 모든 국민이 동등한 소득 증가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소득분배 지표(5분위 배율)를 보면 올해 9월 말 현재 고소득층(5분위 계층)의 가처분소득이 저소득층(1분위 계층)의 5.05배로, 지난해의 4.98배보다 커졌다.

선진국에 견줘 뒤쳐지는 사회 투명성, 서비스 산업의 더딘 발전, 심각한 저출산·고령화가 1인당 소득 증가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합뉴스

을 효과가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어디까지나 평균 개념으로, 모든 국민이 동등한 소득 증가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소득분배 지표(5분위 배율)를 보면 올해 9월 말 현재 고소득층(5분위 계층)의 가처분소득이 저소득층(1분위 계층)의 5.05배로, 지난해의 4.98배보다 커졌다.

선진국에 견줘 뒤쳐지는 사회 투명성, 서비스 산업의 더딘 발전, 심각한 저출산·고령화가 1인당 소득 증가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합뉴스

을 효과가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어디까지나 평균 개념으로, 모든 국민이 동등한 소득 증가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소득분배 지표(5분위 배율)를 보면 올해 9월 말 현재 고소득층(5분위 계층)의 가처분소득이 저소득층(1분위 계층)의 5.05배로, 지난해의 4.98배보다 커졌다.

선진국에 견줘 뒤쳐지는 사회 투명성, 서비스 산업의 더딘 발전, 심각한 저출산·고령화가 1인당 소득 증가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합뉴스

을 효과가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어디까지나 평균 개념으로, 모든 국민이 동등한 소득 증가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소득분배 지표(5분위 배율)를 보면 올해 9월 말 현재 고소득층(5분위 계층)의 가처분소득이 저소득층(1분위 계층)의 5.05배로, 지난해의 4.98배보다 커졌다.

선진국에 견줘 뒤쳐지는 사회 투명성, 서비스 산업의 더딘 발전, 심각한 저출산·고령화가 1인당 소득 증가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합뉴스

을 효과가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어디까지나 평균 개념으로, 모든 국민이 동등한 소득 증가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소득분배 지표(5분위 배율)를 보면 올해 9월 말 현재 고소득층(5분위 계층)의 가처분소득이 저소득층(1분위 계층)의 5.05배로, 지난해의 4.98배보다 커졌다.

선진국에 견줘 뒤쳐지는 사회 투명성, 서비스 산업의 더딘 발전, 심각한 저출산·고령화가 1인당 소득 증가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합뉴스

을 효과가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어디까지나 평균 개념으로, 모든 국민이 동등한 소득 증가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소득분배 지표(5분위 배율)를 보면 올해 9월 말 현재 고소득층(5분위 계층)의 가처분소득이 저소득층(1분위 계층)의 5.05배로, 지난해의 4.98배보다 커졌다.

선진국에 견줘 뒤쳐지는 사회 투명성, 서비스 산업의 더딘 발전, 심각한 저출산·고령화가 1인당 소득 증가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합뉴스

을 효과가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어디까지나 평균 개념으로, 모든 국민이 동등한 소득 증가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소득분배 지표(5분위 배율)를 보면 올해 9월 말 현재 고소득층(5분위 계층)의 가처분소득이 저소득층(1분위 계층)의 5.05배로, 지난해의 4.98배보다 커졌다.

선진국에 견줘 뒤쳐지는 사회 투명성, 서비스 산업의 더딘 발전, 심각한 저출산·고령화가 1인당 소득 증가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합뉴스

을 효과가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어디까지나 평균 개념으로, 모든 국민이 동등한 소득 증가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소득분배 지표(5분위 배율)를 보면 올해 9월 말 현재 고소득층(5분위 계층)의 가처분소득이 저소득층(1분위 계층)의 5.05배로, 지난해의 4.98배보다 커졌다.

선진국에 견줘 뒤쳐지는 사회 투명성, 서비스 산업의 더딘 발전, 심각한 저출산·고령화가 1인당 소득 증가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합뉴스

을 효과가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어디까지나 평균 개념으로, 모든 국민이 동등한 소득 증가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소득분배 지표(5분위 배율)를 보면 올해 9월 말 현재 고소득층(5분위 계층)의 가처분소득이 저소득층(1분위 계층)의 5.05배로, 지난해의 4.98배보다 커졌다.

선진국에 견줘 뒤쳐지는 사회 투명성, 서비스 산업의 더딘 발전, 심각한 저출산·고령화가 1인당 소득 증가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합뉴스

을 효과가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어디까지